

배당소득 稅혜택·연휴 확대...지역경제 회복 '글쎄'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혁신·공정·사회이동성 목표 10대 과제 소상공인 금융지원 '3중 세트'·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부담 덜어줘 공공청사 복합개발 2035년까지 도심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

정부가 3일 내놓은 역동경제 로드맵이 과연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일각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등 '기대만 우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소상공인 위기 극복, 한국 경제의 청사진을 내건 정부 정책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돼 왔지만, 단순 지원, 기존 정책의 짜깁기 등에 머문다. 한국 경제의 양극화, 소비 침체, 미래 경쟁력 약화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또 강력한 구조 개혁 없이 일부 정책만으로 현재의 경제 구도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내걸고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

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목표 하에 10대 과제도 제시했다. 혁신생태계를 강화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본시장 밸류업'을 내세웠다.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주주의 배당소득은 저율 분리과세 하겠다는 게 골자다. 재계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거나 미국처럼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겠다는 취지다. 먹거리 분야 관세율을 낮춰 필수 생계비 부담도 덜어내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낱파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요일제 공휴

일도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선진국은 낱파 지정 공휴일에 모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전면에 부각했다. 빚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버티다 고금리 장기화로 연체·폐업의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소상공인의 구제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지원 '3중 세트'(상환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가 추진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확대되고,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된다.

소상공인의 배달료와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인근 민생안정자금으로는 하반기에 1조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전기료·용자·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에 용자도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하반기 편성할 내년 민생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 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대상은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이다. 공공청사 복합 개발에 따른 여유 공간은 임대주택(연합 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포함), 공익시설, 상업시설로 활용한다. 오는 10월까지 노후 청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시범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 도입을 통해서도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 장기 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민간 임대 사업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장기간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완화를 검토한다.

정부는 또 '자유무역협정(FTA) 경제 영토 세계 1위' 도약을 위한 통상정책 로드맵, 구시대적 규제에 묶인 토지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는 59개국, 건수로는 21건이다. 경제 영토 기준으로 보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를 확보하는 수준으로, 싱가포르(87%)에 이어 세계 2위다. 정부는 통상정책 로드맵의 수립과 총실현 이행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싱가포르를 제치고 'FTA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는 민간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토지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 이용체계를 통합적으로 개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개발 방향을 담은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연합뉴스



농협광주본부는 3일 본부 대강당에서 광주상호금융 디지털리더 111 발대식을 개최했다.

<연합광주본부 제공>

농협광주본부 111개 지점에 '디지털 전담요원' 배치

어르신 디지털 금융서비스 도와

농협광주본부 내 14개 지역농협의 111개 전 지점에 '디지털 전담요원'이 배치된다. 고령화가 심한 농촌지역 현실을 감안, 어르신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비대면 금융·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농협광주본부는 3일 본부 대강당에서 광주 상호금융 '디지털리더 111' 발대식을 개최했다.

'디지털리더 111'은 광주본부 관내 14개 지역농

협 전 지점 111개소에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디지털금융 전담인력 선발, 배치함으로써 디지털금융 사업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어르신들이 모바일·디지털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꾸려졌다.

111명의 '디지털리더'들은 모바일뱅킹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광주 상호금융 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적극 돕고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또 타 금융권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한 비교·

분석, 농협의 대표적인 금융플랫폼인 NH뱅크 및 마이데이터서비스에 대한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는 일도 하게된다.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노출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고객 자산보호 활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농협광주본부 관계자는 "디지털금융은 농협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필수 핵심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을 통해 디지털금융 인재육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농어촌공사 안전 일터 조성 'KRC SAFETY협의회' 개최 중대재해 예방 방안 등 특강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일 중대재해 제로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KRC SAFETY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 관리 발전 방안 모색 및 안전관리 주요 현안 공유, 특강 등 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안전 보건 담당자를 포함한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사업장(5~50인 미만)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류관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과장의 특강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또 안전관리 총괄 부서인 안전혁신실과 전국의 안전 보건 담당자들이 지역·사업별 추진하고 있는 안전 활동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전략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승재 부사장은 "안전사고는 사전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안전관리 체계를 준수하고, 안전

관리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6월 건설 경기실사지수 소폭 상승...“불황 탈출은 역부족”

대기업 떨어지고 중소기업 올라

지난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 달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설연)에 따르면 지난 6월 CBSI는 전월 대비 1.9p 상승한 69.6을 기록했다.

CBSI는 건설사업자의 체감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

다. 따라서 지난달 CBSI는 건설기업의 6월 체감 경기가 5월보다 소폭 개선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72.7로 전월보다 9.1p 떨어지고, 중견기업은 71.0으로 전월보다 2.3p 올랐다. 중소기업은 전월보다 12.5p 오른 65.1을 기록했다.

대기업은 떨어지고 중견기업은 오르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지수 차이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84.6, 지방은 68.9로 각각 5.5포인트와 2.8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CBSI가 오른 것은 부문별 실적 지수 중 공사 진척도를 보여주는 공사기성지수(88.7)와

공사대금이 원활하게 수금되는지를 나타내는 공사대수금지수(88.4)가 전월보다 각각 15.7포인트와 10.2포인트 급상승한 영향이 크다고 건설연은 설명했다.

공종별 신규수주 실적지수를 보면 주택이 70.0으로 13.2포인트 상승하고 토목도 77.2로 8.9포인트 올랐으나, 비주택건축지수가 석 달째 하락하며 최근 1년 내 최저치인 59.6을 기록했다.

7월 건설경기실사 종합전망지수는 69.6으로 6월 지수와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7월에도 부진한 경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는 의미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온라인쇼핑몰 입점 광고비 월 120만 7000원

숙박업은 107만9000원

온라인쇼핑몰과 숙박업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한 달 광고비가 100만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6월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업, 숙박업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 조사' 결과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평균 광고비는 120만7000원이었다.

또 숙박업과 배달업은 각각 107만9000원, 10만8000원이었다. 숙박업의 경우 노출 광고비로 82만2000원, 쿠폰 광고비로 25만7000원을 각각 지출했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쇼핑몰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SSG닷컴, 무신사 등이다. 배달업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세 곳이고 숙박업은 아날자와 여기어때 두 곳이다.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온라인쇼핑몰 14.3%, 숙

박업 11.5%였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중개거래 및 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로 입점 업체별로 최고 35.0%, 최저 0.0%였고 숙박업은 최고 17.0%, 최저 8.0%의 예약(중개)수수료를 지출했다. 지난해 플랫폼 입점 거래 시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숙박업 7.5%, 배달업 5.3%, 온라인쇼핑몰 5.1% 등이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 응답)은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상품의 부당한 반품(48.4%)이 가장 많이 꼽혔다. 배달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 숙박업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가 각각 지목됐다.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업 74.0%, 온라인쇼핑몰 65.0%, 배달업 61.3%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공정감독 강화'와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주로 꼽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기중앙회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검토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환영한다며 기준금리 인하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수출 실적 개선에도 고금리와 고부채, 내수 부진 장기화로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금융지원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대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와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이번 종합대책이 경영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의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역시 정부 지원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체적인 경영 개선 노력을 병행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고 민생경제의 근간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이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100일간 위반 266건 적발”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100일 간담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100일간 총 266건의 확률공개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3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총 1255건을 모니터링해 266건에 대해 시정요청을 진행했고, 이 중 185건의 시정이 완료됐다"며 실적을 공개했다.

시정요청 대상이 된 게임물 사업자 중에서는 국외 사업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국내 사업자가 40%를 차지했다. 위반사항 중에서는 '확률 미표기'가 59%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이어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유무 미표기 29%, 표시방법 위반 12%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맡아왔다. 게임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위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3차로 시정 권고·시정명령을 내리는 구조다. 박우

석 게임정보관리팀장은 "해의 게임물 5건의 경우 시정 권고 단계까지 진행됐다"며 "시정명령까지 불이행할 시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게임물 이름이나 국적을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행정조치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돼있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사업자 관련 조치사항이다 보니 공개는 조심스럽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 같다"고 말했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은 게임사에 대해 형사 처벌 조항까지 두고 있지만, 현행법상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확률정보 공개를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94.01 (+13.15)
↑ 코스닥	836.10 (+6.19)
↓ 금리(국고채 3년)	3.160 (-0.009)
↑ 환율(USD)	1390.60 (+2.40)